



Welfare  
Issue  
Today

2021  
9.  
vol. 102

# 복지이슈 Today

편집인의 글	3	코로나19, 1년 후 / 안철홍
이슈	4	[이슈①] 코로나19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다방면 접촉과 유연한 지원 / 김용득
	5	[이슈②] 뉴노멀 시대 서울시민의 여가행태 변화와 과제 / 백선휘
	6	[이슈③] 장애인복지관의 뉴노멀과 워드 코로나 / 최미영
	7	[이슈④] '워드 코로나'가 두려운 노숙인들의 삶 / 김진미
	8	[이슈⑤] 코로나 팬데믹 2년, 우리는 이주민과 공존하고 있을까? / 허오영숙
	9	[이슈⑥] 코로나 1년 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일상 적응기 / 안선애
이슈와 통계	10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자원 개발 실태 변화 / 이순성
해외동향	12	[미국] 앤드류 양과 보편적 기본소득 / 전채경
	13	[영국] 코로나19와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 / 강상원
	14	[프랑스] 새로운 환경변화로 강화된 생후 1000일 영유아 지원계획 / 이은주
	15	[독일] 팬데믹 기간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단축근로 보조금 규제 완화 / 권민정
	16	[스웨덴] 사회적 구조 전환을 통한 폭력 없는 스웨덴 구현 / 홍희정
	17	[호주] 코로나19와 반려동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성찰 / 박홍재
	18	[일본] 학업과 돌봄 사이에서 고민하는 영 케어러의 증가 / 이성한

# 복지이슈 Today

## 편집위원회

김미현(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대외홍보팀 차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집필진

강상원(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권민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미((사)열린복지지디센터 센터장)  
박홍재(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혜(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안선애(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성현(일본 사쿠대학 인간복지학부 조교수)  
이순성(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은주(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전채경(미국 미주리대학교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최미영(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 국장)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홍희정(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 1년 후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월부터 다시 늘었다. 학교와 종교시설이 또다시 열기와 닫기를 반복 중이고, 재택근무는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누군가 급조해낸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보통명사처럼 통용된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번호 주제는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다. 복지가슈 투데이는 지난해 4~6월호, 3개월에 걸쳐서 연속으로 코로나19 특집을 다뤘다. ‘재난과 사회복지’(2020.4월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 ‘코로나19가 되살린 복지 논쟁’(2020.5월호)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돌아봤다. 그리고 지난해 6월호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라는 제목 아래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호는 지난해 6월호의 속편 격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직무의 속성상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업무들이 많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나가던 지난해 봄, 사회복지 현장은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기본 서비스를 멈추지 않으려는 기발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교과서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을 계속 겪으면서 현장은 지쳐갔다. 그로부터 1년 후, 2021년 여름의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6월호 특집 때 글을 썼던 필자들에게 ‘1년 후’를 키워드로 다시 원고를 부탁했다.

들어온 원고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휴관까지 해야 했던 각종 복지관들의 사정은 1년 전에 비해 훨씬 안정되고, 어느 정도 적응까지 한 모습이다. ‘언택트 서비스’ 초창기에는 일방적인 동영상 서비스만 겨우 제공하는 형편이었다면, 지금은 종사자와 당사자 모두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면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까지 가능해진 곳이 많아졌다. 김용득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모습을 ‘다방면 접촉과 유연한 지원’으로 요약했다.

반면 노숙인들의 처지는 아직 어렵다. 보건소, 시립병원 등이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이 되면서 노숙인들은 간단하게 치료받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상담을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면 매번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이주민들의 처지도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을 배제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가 인권단체들이 항의하자 철회한 일도 있었다. 코로나19는 여가활동의 불평등도 심화시키고 있다. 6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2018년 5.8회에서 2020년 1.6회로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기존 여가 소외계층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는 약자에게, 소수자에게 유독 가혹하다. 이는 지난해 초창기 때나 1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 없는 사실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윤리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연대와 공존, 호혜에 대해 자꾸만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가 이번호에 기고하면서 마무리 삼아 쓴 문장인데, 이 말을 곱씹어보게 된다.

이번호도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다방면 접촉과 유연한 지원

글 | 김용득



2020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관 대응 지침 4판에 제시된 대표 문구는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운영’이었다. 이에 따라 한 동안 사회복지관 등은 휴관하였다. 2021년 7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관 대응 지침 8판에서는 ‘4단계 대유행 단계에서 이용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 운영’, ‘10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용정원 산정에서 제외’ 등과 같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달라졌다. 대응 지침의 이런 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 중단이 가져오는 이용자의 위협과 고립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서비스 유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지혜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현장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모습은 다방면 접촉(multi contact)과 유연한 지원(personalization)으로 요약된다. 먼저 다방면(多方面) 접촉은 대면(對面)과 비대면(非對面)의 경계를 극복하고 최적의 혼합을 모색하는 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면을 필수 요소로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대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비대면을 최대한 대면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안부 편지, 키트 배달, 동영상 제공, 온라인 화상 소통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면과 비대면의 최적의 혼합은 이용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립이나 방임 상황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대면 접촉을 상당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학습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비대면 수단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취약한 노인의 경우 디지털 격차로 비대면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노인들의 문화, 여가생활 지원은 디지털 수단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처럼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모습의 다른 축은 표준화

된 접근에서 유연한 지원(personalization)으로의 변화이다. 유연한 지원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접근이 우세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대규모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전의 대규모 집단을 작은 소집단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개별성에 따라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개별화된 지원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사람에 따라 그 양상과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고독과 외로움, 식사의 어려움, 주거의 위협, 소통의 단절 등의 어려움이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고, 이에 대응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셋째, 지역사회 자연 연결망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금쪽같은’ 자연 연결망만 남는다. 그래서 금쪽같은 연결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특화된 자원개발이 모색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유연한 지원은 소규모, 개별화, 자연관계 등에 대한 강조로 요약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현장 대응은 ‘다방면을 통한 유연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이런 흐름은 ‘지금까지의 틀을 깨는 새로운 접근의 모색’, ‘다양한 방식의 유연한 근무 형태’, ‘모든 프로그램의 적절성 재검토’ 등으로 현장에서 표현되고 있다. 반면에 이런 변화에 대한 현장의 걱정도 작지 않다. ‘전화나 카톡 소통으로 인해 전보다 느슨해지는 관계’, ‘은둔형 이용자의 증가’, ‘컴퓨터에 더 의존하는 근무 형태’ 등이 지적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은 대면과 접촉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비대면을 통해서 대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비대면 수단으로 대면의 공백을 보완하는 유일한 길은 개별적인 형편에 맞게 비대면을 구사하는 개별적이며 유연한 접근이다.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인구집단에 따라 지역적인 취약성의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가지는 디지털 격차에 따라 서비스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비스 정책의 모습도 이전처럼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이기보다는 ‘다방면을 통한 유연한 지원 정책’이어야 한다.



# 뉴노멀 시대 서울시민의 여가행태 변화와 과제

글 | 백선휘

이슈  
2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볼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이토록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좀처럼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이 감염병은 우리의 사회질서 전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노동과 필수활동을 제외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의 여가활동은 극장이나 전시장, 축제 등 대규모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가족과 친구, 동호회 등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감염병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대면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기존의 일상적 여가행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공연·예술·극장 관람, 오프라인 사교활동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같은 시기 온라인 쇼핑과 미디어 이용은 크게 증가하였다<sup>1)</sup>.

서울시민의 여가행태 변화는 서울문화재단의 '2020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6시간, 주말 6.5시간으로 2018년 평일 3.2시간, 주말 6.0시간에 비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주52시간 근무제도 정착 등의 요인으로 최근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통근시간 감소 등의 추가적 요인이 여가시간 증가에 더욱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8년과 비교하여 보면, 독서 및 음악감상은 2018년 10.8%에 비해 거의 10%p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TV/비디오시청, 운동 등도 다소 증가한 반면, 여행 및 야외나들이 경험률은 19.7%에서 12.3%로 크게 감소하였다. 문화예술관람 경험률 또한 2018년 11.9%

에서 2020년 9.9%로 감소하였으며, 총관람횟수는 6.8회에서 4.2회로, 총 관람비용은 12만원에서 7만4000원으로 감소하여, 문화예술 관람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시설 폐쇄 및 제한적 운영, 이동 자제 등의 요인으로 직접관람과 여행 등이 어려워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TV시청이나 독서 및 음악감상 등의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민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 및 야외나들이(54.0%), 문화예술관람(32.3%), 운동(27.1), TV/비디오시청(24.3%) 순으로 나타나, 여가 희망활동과 실제 실행활동 간 격차가 컸다.

여가활동 변화에서 정책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여가활동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60대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2018년 5.8회에서 2020년 1.6회로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참고로 2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6.7회에서 5.5회로 1.2회 감소). 문화예술 관람의 격차는 온라인 매체 활용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감염병 시대 여가활동의 대안으로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 관람이 부상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의 39.7%가 문화예술 관람을 현장 관람에서 온라인 관람으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관람 경험률이 20대 이하 50.4%, 30대 52.6%, 40대 42.8%, 50대 42.1%인 것에 비해, 60대 이상의 경우 19.2%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시니어 계층이 코로나19 시대 여가활동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여가행태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집이 중요한 여가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이면에는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여가활동의 결핍이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등 기존의 여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여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가는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뉴노멀 시대의 여가 형평성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잠시일 것만 같았던 팬데믹(Pandemic)은 벌써 2년 차에 들어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서비스 정상화를 꿈꾸었지만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자 이용자들은 물론 복지관 동료들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팬데믹 초기보다 우리가 훨씬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짧았지만 강렬하게 변화에 맞선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 개인별 지원 다각화와 적극적 대면을 위한 실천

팬데믹 상황 초기 몇 달간의 서비스 공백(복지관 휴관 형태)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일상을 위태롭게 하였고, 그들의 삶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절실히 깨달았고, 우리는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개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일상 공간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제공받을 있도록 당사자 주변인(가족, 돌봄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다영역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결(Connecting)을 통한 다양한 시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당사자 가정과 지역사회 일반복지수단(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이 활용되도록 하였다. ‘언택트(Untact)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추진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금은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초기만 하더라도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방적 동영상 제공의 빈도가 높았으나 점차 당사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강화되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원격 화상교육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소통, 연대, 파트너십의 중요성: 묻고, 의논하기

팬데믹을 맞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천을 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무엇이 요구되는지? 어떤 방식이었으면 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동료 기관과 주민들에게 묻고 의논하였다. ‘묻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가 계획한 것을 보완해주었고, 더 쉬운 방법이나 유용한 자원을 알려주었으며, 때로는 이해와 용기도 건네주었다. 이렇듯 팬데믹 상황 속에서 소통, 연대, 파트너십은 그 어떤 기술적 대응보다 당사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이 이용자의 마음에까지 닿아서였을까? 지난해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비록 서비스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아마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노력과 팬데믹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공감과 파트너십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 예상해 본다.

### 워드 코로나,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며

팬데믹 2년차, 화상회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심리운동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료는 “꼭 코로나19 시기에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과가 없는 날, 주말이나 여가 때 온라인으로 심리운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라고 말을 건넨다.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동료는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본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 있지만, 성장하고 나아가는 부분도 있다는 걸 실감한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워드코로나 시대,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메타버스(Metaverse) 환경을 맞아 다시 ‘기회의 끈’과 ‘배움의 끈’을 이어나가자는 다짐을 해본다. 여전히 방역체계 4단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애인 보통의 삶’을 향한 우리의 다짐과 의지는 그 어떤 대응 단계보다 높다고 여긴다.



## ‘위드 코로나’가 두려운 노숙인들의 삶

글 | 김진미

이슈  
4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과 싸운 지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도 꽤 시간이 지나야 심각한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한다.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니,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계유지를 힘들게 한 것은 물론이고, 일상과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등 다방면의 위기를 경험하게 했다. 고통의 시간을 똑같이 겪어 온 노숙인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자 안정적인 잠자리와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노숙인들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의 인권은 더욱 그러했다. 먹는 것부터 문제였다. 수백 명이 줄을 서고 한 공간에서 식사하는 무료급식소는 감염의 위험이 커서 초기대책은 무료급식소를 잠정 폐쇄하는 것이었다. 곧 운영이 재개되긴 했지만 밥 먹기 힘들어진 사람들의 혼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플 때 치료받는 것도 전보다 수월치 않았다. 보건소, 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은 대개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이 되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응급실을 찾으려면 여러 병원에 연락해도 쉽지 않았다. 지하도 대피소는 폐쇄되었다. 비바람을 피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거리노숙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 위생관리가 어렵고 거리두기도 여의치 않으니 운영할 수 없었으리라 이해한다.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반면 노숙인들 입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전에 기초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시간이 도래한 셈이었다.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1년 가까이 노숙인시설의 집단감염은 옹케 피어나보다 했다. 하지만 역시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올해 초 노숙인시설에서 100여명에 가까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모든 노숙인들에게 밥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고, 손 소독과 손 씻기를 강조하고, 되도록 시설 안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수시로 생활공간을 소독하며,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총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자고, 한 공간에서 수십 명씩 밥을 먹는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만으로, 손 씻기만으로 감염

을 차단하기란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집단감염에 대처하면서, 그리고 이후 코로나19 유행의 파고가 반복되면서, 노숙인 서비스의 벽은 점점 높아져 간다. 노숙인이 서비스 상담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느라 귀가 짓무를 지경인데 이제 매주 선별진료소를 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이들을 대면하는 일선 실무자들은 곤혹스럽다. 다행히 지난 4월부터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식당 아크릴 칸막이 정도가 아니고 개인별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시도도 있다.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각각 빈 호텔을 빌려 노숙인 임시격리시설로 활용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과제들은 여전히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다면, 그때 노숙의 고난을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관건은 노숙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을 점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잣대로 노숙인 서비스를 재설계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을 피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라는 대응방법을 제시했다면, 이는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필요할 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사적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2020년 4월, UN 주거권특별보좌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_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노숙인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침을 살펴보면 홈리스 및 홈리스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주택을 제공하고, 위생 및 치료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전염병 대유행이 끝났을 때 홈리스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호텔 또는 모텔의 객실을 확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병원과 같은 건물을 개조할 것 등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권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코로나 팬데믹 2년, 우리는 이주민과 공존하고 있을까?

글 | 허오영숙



코로나 팬데믹 2년째, 사회의 풍경이 바뀌었다. 일상 이 된 마스크,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한 치열한 노력, 문 닫는 가게들, 텅 빈 국제공항...

2010년 126만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수는 2019년 12월 252만명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증가 추세이던 외국인 인구가 10년 만에 감소했다. 2020년 12월에 204만명으로 줄었고, 2021년 6월 현재는 198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경 폐쇄와 항공편 중단, 까다로워진 출입국 절차 등은 출신국과 한국, 양쪽에 삶의 등지를 가진 이주민들의 삶을 제한한다. 이런 환경에서 이주민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거리 노숙을 하다가 온라인 모금으로 귀국비용을 지원받은 한국계 중국인 L의 사연을 보자. L은 2018년 8월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와서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받아 일당노동일을 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일 자리를 잃었다. 벌여놓은 돈도 떨어지고 비행기 값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살고 있던 고시원을 나와야 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통편이 중단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남겨둔 교통비마저 소진한 L은 2020년 6월부터 노숙을 시작했다. 한국의 지원체계는 외국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일자리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지자 어떻게 하든 귀국할 길을 찾아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오가는 배는 화물선밖에 없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비싸더라도 비행기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나마 운항 횟수가 줄면서 항공편 값은 엄청 비싸졌다. 출국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코로나 검사 비용과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2주간의 자가격리 숙소 비용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홀리스 단체가 온라인 모금을 한 끝에 L은 2021년 8월 귀국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서 귀국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K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베트남계 한국인, 귀화한 사람이다. 그녀는 연년생 아이들의 양육 감당이 쉽지 않자 베트남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셔왔다. 국내법은 외국인 친정 가족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녀가 만7세가 되기 전까지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K의 친정어머니는 한국에 오신 지 4년 10개월이 지났고, 둘째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더 이상 친정어머니가 국내에 체류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지만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았다. K는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신 친정어머니를 상황이 악화된 베트남에 가시도록 할 수가 없었다. 법무부 출입국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짧게, 짧게, 체류 연장을 해주었다. 때로는 2주, 때로는 한 달씩. “돌아서면 또 출입국사무소 가야 한다”라고 말하던 K는 이제 자신이 한국인이 된 지 10년이나 되었다면서, 한국 아이를 키워준 한국인의 부모님을 한국 정부가 왜 위협에 방지하려 하느냐고 되묻는다.

마스크 구입에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외국인을 구분하고 배제하던 공적 시스템은 지난 1년 동안 달라졌을까? 2021년 3월 17일, 경기도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 명령은 이를 만에 철회되었다.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필두로 유럽 30개국 대사들이 외교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에 재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0년 중앙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국인과 가족을 이룬 자녀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세대주에게 지급했다. 2021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외국인 기준은 여전히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경기도는 2021년에는 외국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국인이 백신을 실제로 접종하려면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코로나19는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연대와 공존, 호혜에 대해 자꾸만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 코로나 1년 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일상 적응기

글 | 안선애

이슈  
6

2020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거듭 연기하던 학교가 4월초에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교육부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취약계층 가정이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pc 등 온라인 학습 준비물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초중고생이 2명 이상 되는 가정은 자녀 수대로 새로 학습기기를 마련할 경제 형편이 못돼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기기를 대여한다고 했지만 신청마저 여의치 못한 아이들도 상당수였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즉시 사례관리 당사자 가정과 그동안 관계했던 학교와 연계하여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찾았다. 그 결과, 4월초 온라인 개학 시기에 맞춰 고등학교 3학년 쌍둥이와 중학생 2명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실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복지관 식당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대안학교 강사와 교육문화 강사를 섭외해 학습지도도 지원했다. 복지관까지 오기 어려운 10가구의 아이들에게는 노트북 17대를 대여하여 지원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다. 복지관에서 온라인 학습을 한 고3 쌍둥이한테서 조용하고 인터넷 환경이 좋은 복지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복지관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맞이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는 복지관 직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이런 서비스가 투여되는 인력이나 예산, 시간 등을 생각하면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나 효과성은 뛰어났다고 생각한다. 복지관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자원 마련 및 사업의 필요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온라인 개학 후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기까지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맞춤형으로 개입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복지관 차원에서 역력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하고 싶어

도 할 수 없었던 머뭇거림(인력, 예산 등의 장애물)이나 장벽을 단번에 깰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관이 사회의 변화나 문제 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복지관은 ‘휴관’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휴관(사회복지관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이라는 말 대신 ‘비상근무(이용자들이 사회복지관을 방문 이용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근무 중이며 긴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부른다.

‘비상근무’라서 교육문화사업, 카페 운영, 집합 프로그램 등은 중단되거나 온라인, 소규모로 진행되지만, 취약계층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보호사업 등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업무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일상이다. 복지관으로서도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면서 복지관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미디어센터 ‘늘봄’ 개소였다. 코로나19로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종사자들도 회의나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노트북을 들고 조용한 프로그램실을 찾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화상채팅을 하느라, 또는 영상 제작을 위해 컴퓨터와 씨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사들은 만능이 되어야 했는데, 요즘은 더욱더 만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지자체와 논의한 끝에, 복지관 내에 동영상과 팟캐스트 제작, 화상회의 및 교육, 온라인 상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늘봄’을 개소하게 되었다.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감사하나 장비가 뛰어날수록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래도 불평 없이 어떻게 하면 이 공간과 장비를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대견스럽고, 그 수고스러움에 박수를 보낸다.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자원 개발 실태 변화

글 | 이순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지속으로 소상공인 등의 나눔활동이 축소되고 대면 행사가 제한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신규자원 개발 및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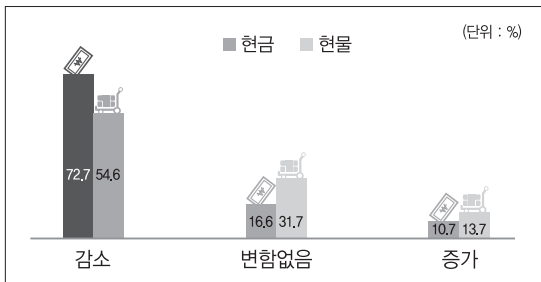
실제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등의 민간자원 개발 상황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중 총 205개 시설이 민간자원개발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용시설은 180개(87.8%), 생활시설은 25개(12.2%)이다.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23일까지이다.

[표 1] 민간자원 개발 실태조사 참여 시설 수

구분		조사 시설수	%
전체		205	100.0
시설 유형	이용시설	180	87.8
	생활시설	25	12.2
세부 시설 유형	사회복지관	67	32.7
	노인복지관	29	14.1
	장애인복지관	37	18.0
	노인복지시설	17	8.3
	장애인복지시설	45	22.0
	노숙인시설	10	4.9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금품(현금, 현물)의 변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현금 72.7%, 현물 54.6%로 현물 후원의 감소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 코로나19 이후 후원금품 변화 인식

조사 참여 시설의 후원금 평균수입은 2020년 120백만원이며, 코로나19 이전(2017~19년) 평균수입 138백만원 대비 12.8% 감소하였다. 복지관 중에는 장애인복

지관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21.0%)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16.1%, 노인복지관 -7.5%의 감소를 보였다. 한편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양로시설 등)과 노숙인시설(노숙인 요양, 자활시설 등)은 각각 2.6%, 64.5%의 증가를 보여, 시설유형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 시설 유형별 후원금(현금) 평균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17~19 평균	2020	2020증감 (2017~19 대비)
전체	143	137	132	138	120	▽12.8%
사회복지관	257	245	228	244	204	▽16.1%
노인복지관	124	127	117	123	114	▽7.5%
장애인복지관	162	149	147	153	121	▽21.0%
노인복지시설	28	33	33	32	32	▲2.6%
장애인복지시설	28	29	28	28	25	▽10.2%
노숙인시설	81	73	112	89	146	▲64.5%

후원금(현금) 수입 변화를 후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비정기 개인기부(-28.7%), 민간단체(-24.3%), 영리법인(-23.6%)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비영리법인과 소관법인의 경우는 각각 8.0%, 7.5%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3] 후원 주체별 후원금(현금) 평균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17~19 평균	2020	2020증감 (2017~19 대비)
전체	143	137	132	138	120	▽12.8%
비영리법인	40	39	42	40	44	▲8.0%
정기 개인기부	25	25	22	24	21	▽14.1%
비정기 개인기부	13	13	13	13	9	▽28.7%
민간단체	21	23	20	22	16	▽24.3%
영리법인	20	20	18	19	15	▽23.6%
소관법인	4	5	6	5	6	▲7.5%
공공기관	5	5	4	5	4	▽10.3%
국가기관	5	1	0.8	2	0.7	▽67.9%
기타	9	6	6	7	5	▽33.1%

그리고 후원품(물품)의 수입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 참여 시설의 후원품 평균수입은 2020년 114백만원이며, 코로나19 이전(2017~19년) 평균수입 106백만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후원품(물품) 수입에 대해서도 후원 주체별로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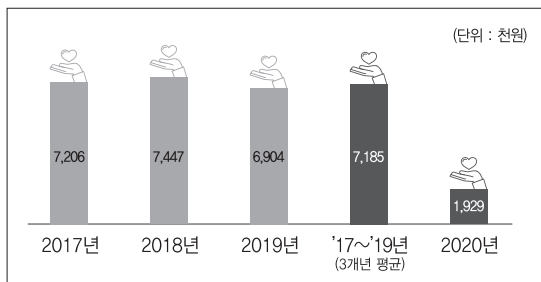
면, 수입이 크게 증가한 주체는 국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물품지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후원품 수입 비중이 다소 큰 영리법인, 개인기부 등에서는 후원품 수입이 감소하였다.

**[표 4] 후원 주체별 후원품(물품) 수입 변화**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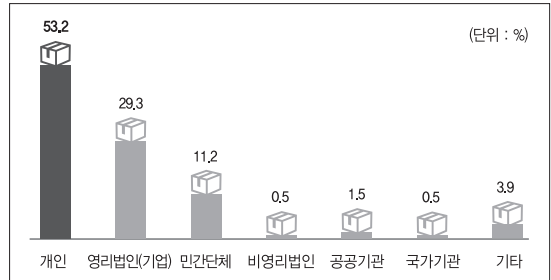
구분	연도	2017	2018	2019	2017~19 평균	2020	2020증감 (2017~19 대비)
전체		105	109	102	106	114	▲8.2%
영리법인		40	46	42	43	42	▽2.7%
민간단체		21	25	24	23	23	▽0.6%
비영리법인		11	12	11	11	18	▲59.0%
정기 개인기부		9	7	7	7	4	▽39.9%
비정기 개인기부		18	13	11	14	12	▽12.1%
국가기관		0.7	1	0.9	0.9	5	▲442.5%
공공기관		2	3	3	3	6	▲142.5%
소관법인		0.7	0.3	0.8	0.6	1	▲63.2%
기타		2	2	3	3	2	▽3.0%

개별 시설 측면에서 보면 후원금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바자회 등의 모금 이벤트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참여 시설 평균 모금 이벤트 수입은 2020년 192만9000원으로 코로나19 이전(2017~19년) 718만5000원 대비 -73.2%의 감소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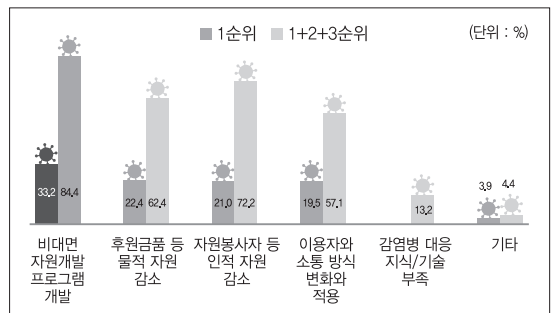
**[그림 2] 모금이벤트(바자회 등) 실적 변화**

시설 자원개발 담당자가 생각하는 후원(현금, 현물)이 가장 크게 감소한 대상은 개인으로 53.2%의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영리법인(기업) 29.3%, 민간단체 11.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이 개인과 기업의 후원활동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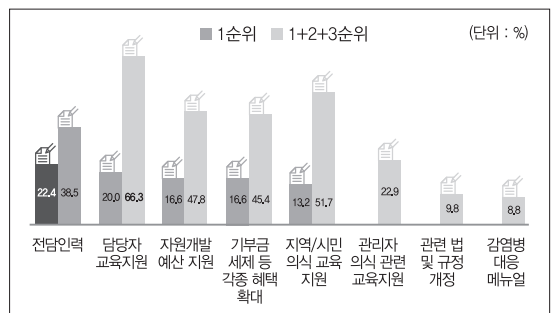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 이후 가장 후원이 감소한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자원개발 업무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비대면 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33.2%, 1순위 기준)이며, 다음으로 후원금품 감소(22.4%), 자원봉사자 감소(2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점**



**[그림 5] 자원개발 관련 정책 지원 욕구**

시설에서 자원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자원개발 전담인력(22.4%, 1순위 기준)이며, 다음으로 담당자 교육지원(20.0%), 자원개발 예산지원(16.6%), 기부에 대한 세제확대(16.6%) 순으로 나타났다.

## 앤드류 양(Andrew Yang)과 보편적 기본소득



앤드류 양(Andrew Yang)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급부상한 대만계 이민자 2세 정치인이다. 뉴욕 주에서 태어난 앤드류 양은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졸업 후 스타트업 기업과 비영리단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든 미국 성인에게 월 1000달러(한화 약 12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자유배당금(Freedom Dividend)을 공약으로 내걸어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담론을 대중화한 인물로 떠올랐다. 앤드류 양은 미국 대선 경선 뉴햄프셔 예비선거 직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정치 관련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를 설립하였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시기 미국 연방정부가 수차례의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의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은 더욱 힘을 얻기도 했다. 그 덕에 앤드류 양은 2021년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초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기도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시가 폐쇄되고 시민들이 락다운의 피해로 침울해있을 때 그는 뉴욕시 전면 재오픈과 뉴욕시 저소득층 50만명에게 연간 2000달러 현금 지원(cash relief)을 기치로 내걸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뉴욕시장 경선 공약인 저소득층 현금 지원책은 그 자신의 대선 경선 공약이었던 보편적 기본소득론으로부터 후퇴한 것이며 소모되는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그가 대선 경선 후보로서 내놓았던 공약에서는 미국을 휩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증가의 위험에 대해 강조하며 모든 미국 성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열린 2021년 뉴욕 시장 경선에서

는 뉴욕시민 중 저소득층 50만명만을 타겟으로 하겠다고 보편성을 포기하였다. 기본소득 금액 역시 월 1000달러에서 연간 2000달러로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다. 기존의 자유배당금(freedom dividend) 대신 현금지원책(cash relief)이라고 부르는 등 정책 명칭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달러의 뉴욕시 예산을 투입 하겠다고 앤드류 양의 뉴욕시 현금지원정책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와 경쟁하던 경선 후보들 중 다이앤 모랄레스(Dianne Morales)와 카를로스 멘차카(Carlos Menchaca) 역시 뉴욕시 유권자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다.

갑작스럽게 경선 선두주자가 되었던 앤드류 양은 언론과 경쟁자들의 면밀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터진 여러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뉴욕시가 전면 재오픈되면서 그가 주장하던 재오픈 공약이 힘을 잃었다. 이후 오히려 인종 간 갈등 문제와 치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에릭 아담스(Eric Adams) 예비 후보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결국 앤드류 양은 여론조사 순위가 4위로 떨어지고 말았고, 뉴욕 시장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하였다. 패인으로는 주요 정책인 현금성 지원 예산의 조달 문제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과 더불어 유명세에 기댄 선거운동의 한계점, 복잡한 뉴욕시 생태에 대한 이해 부족, 흑인 및 라틴계 유권자에 대한 접근 부족 등이 꼽힌다. 그의 기본소득정책 역시 알래스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당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지만 결국 유사한 소득원이 없는 미국 본토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 ● 관련자료

Rubinstein, Dana. (2021.6.30). "How Andrew Yang Went From Front-Runner to Fourth Plac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6/30/nyregion/andrew-yang-mayor.html>

Holder, Sarah and Olivia Rockeman (2021.1.28.). "What Andrew Yang's UBI Proposal Would Mean for NYC". Bloomberg City Lab.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1-28/what-s-in-andrew-yang-s-ubi-proposal-for-nyc>

## 코로나19와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교류의 단절과 이로 인한 우울증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외로움,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olmes et al., 2020; Wang et al., 2021).

영국은 2020년 3월,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래 영국 의학아카데미와 정신건강연구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의 정신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20년 초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한 영국인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사는 영국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2주 동안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일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집중의 어려움 등 다양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알려달라는 표준화된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우울증을 경험한 영국 성인이 전체인구의 약 10%대에 머물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 여성,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전체 성인의 우울증 경험률이 21%인데 비해, 16~39세 청년층의 경우 2020년 11%에서 2021년 29%로, 장애인은 같은 기간 27%에서 39%로 늘었다.

16~29세의 남성의 26%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10명 중 4명(43%)이 비슷한 경험을 호소했다. 30~49세의 경우에는 남성 18%,

여성 25%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했다. 1인 가구 거주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소수 인종 중에서도 우울증 경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자국민의 정신건강과 웰빙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위한 최우선 순위는 전체 인구나 취약 집단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신종 전염병이 심리적, 사회적, 신경학적 측면에서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문분야 및 타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비대면 접촉에서의 소외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특히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Boundless Creativity report, 2021).

소위 코로나블루로 불리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의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의 비중이 36.8%로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이는 영국의 1.5배에 해당한다. 특히 이는 최근의 청년 및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급증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이은환, 2020),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의 증가는 이전까지 복지나 청년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정신건강 문제가, 팬데믹 이후에는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관련자료

Holmes, E.A., O'Connor, R.C., Perry, V.H., Tracey, I., Wessely, S., Arseneault, L., Ballard, C., Christensen, H., Silver, R.C., Everall, I. and Ford, T., 2020.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iorities for the COVID-19 pandemic: a call for action for mental health science, *The Lancet Psychiatry*, 7(6), pp.547-560.

Wang, C., Tee, M., Roy, A.E., Fardin, M.A., Srichokchatchawan, W., Habib, H.A., Tran, B.X., Hussain, S., Hoang, M.T., Le, X.T. and Ma, W., 2021.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sians: A study of seven middle-income countries in Asia. *PLoS one*, 16(2), p.e0246824. Wang, C., Tee, M., Roy, A.E., Fardin, M.A., Srichokchatchawan, W., Habib, H.A., Tran, B.X., Hussain, S., Hoang, M.T., Le, X.T. and Ma, W., 2021.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sians: A study of seven middle-income countries in Asia. *PLoS one*, 16(2), p.e0246824.

이은환. 2020. 코로나 19 시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 & 진단. pp.1-25.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 Boundless Creativity repor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oundless-creativity-report/boundless-creativity-report#ref:4> (마지막확인, 2021-08-19)

OECD, 2021. 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An integrated, whole-of-society response.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ackling-the-mental-health-impact-of-the-covid-19-crisis-an-integrated-whole-of-society-response-Occafa0b/> (마지막확인, 2021-08-19).

## 새로운 환경변화로 강화된 생후 1000일 영유아 지원계획



프랑스의 아동복지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관련 단체, 협회, 기업, 사회복지기관들의 협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생후 1000일 영유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아동건강 관련 전문가인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소아과의사, 산부인과 의사, 아동학 교수 등이 모여 생후 1000일간 아동 및 양육주체인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계획은 7월부터 실행되었다.

이 계획은 전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0~3세 아동기의 건강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빈곤,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실행은 지방 건강처(ARS)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고용연대부(DREETS)가 주관하고, 가족수당기금, 빈곤퇴치위원회, 지역의 문화기관 등 관련 정부기관이 협력한다. 프랑스 인구는 2021년 총 6740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2020년 출산된 영아의 수는 74만명이며 가입여성 평균 자녀수가 1.84명으로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다. 0~3세 아동인구는 남아 111만명, 여아 107만명 등 총 218만명이다(2020년 프랑스 통계청 사회조사).

이번 계획은 6개 주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존의 아동 환경, 특히 취약, 빈곤계층 영아의 환경을 재검토하여 지원 판정기준을 재설정한다. 이는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아빠 출산 휴가를 강화한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담당하는 육아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아빠 출산 휴가를 28일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아빠 출산 휴가 12일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28일은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사

업주는 출산일부터 3일간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위반 시 1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아동을 입양하는 부부의 부모휴가도 16~20주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직업 활동을 하는 엄마를 위해 부모의 이중역할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3) 지원정책 정보 입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용 앱(App 1000 jours)을 만들고, 해당 가정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족수당기관을 통해 부모지원서비스 정보 제공과 지원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한다.

4) 임신기간 엄마의 건강을 위해 약 1000만 유로의 재정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900만 유로의 재정을 확보하여 출산도우미, 사회복지사, 산부인과 의료진 등 등 산모 관리 인력을 2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30개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유로가 지원된 산모와 영아 지원재정을 2021년에는 70개 지방자치단체에 3500만 유로까지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5)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모와 아동을 위한 서비스 기관을 증설할 예정으로 현재 17개 시설을 10개 더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6)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활동을 개발하고 언어, 문화·예술 교육, 영양지원 등을 확대 강화한다. 이외에도 산모와 아동보호 관련 직업군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800만 유로를 추가하여 2022년까지 관련 직업종사자 60만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생후 1000일 영유아 지원계획은 기존의 산모, 영유아 정책의 재정을 크게 늘린 점과 더불어 특히 아빠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0~3세 아동정책이 미흡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고출산 정책보다는 산모의 건강과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아동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 관련자료

[https://solidarites-sante.gouv.fr/IMG/pdf/dp\\_1000\\_premiers\\_jours\\_oct\\_2020\\_002\\_.pdf](https://solidarites-sante.gouv.fr/IMG/pdf/dp_1000_premiers_jours_oct_2020_002_.pdf)

<https://solidarites-sante.gouv.fr/IMG/pdf/rapport-1000-premiers-jours.pdf>

<https://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familles-entance/pacte-pour-entance/1000jours/sur-le-terrain/article/appels-a-projets-1000-premiers-jours>

## 팬데믹 기간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단축근로 보조금 규제 완화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축근로보조금(Kurzarbeitergeld)<sup>1)</sup> 규정을 완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완화된 관련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세 번의 완화과정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2021년 9월 30일까지 단축근로를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단축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9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본래대로 직원의 3분의 1이 단축근로를 할 경우에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2021년 9월 30일까지 단축근로를 시작한 기업의 경우 단축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의 근로시간 부족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채워야할 의무는 없다.

또한 올해 9월까지의 단축근로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금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9월 이후 단축근로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보험금의 절반까지만 지원한다.

2020년 12월 31일 전에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최대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래의 규정에 의하면 12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파견 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담당 기업이 올해 9월이 된 시점에 이미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계속해서 올해 12월까지 단축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방 고용청의 이중지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신청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파산 신청이 철회될 때까지는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라도 사회보험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단축근로 중 근로자가 50%의 소득을 잃게 된 경우 단축근로 보조금 지급 4개월째부터 소득의 70%까지(자녀가 있을 경우 77%까지) 지원하고(2020년 3월 이후 소득을 기준으로 함), 7개월부터는 80%(자녀가 있을 경우 87%)로 상향 조정된다. 이 규정은 우선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본래 단축근로기간 중 새로운 시간제 근로를 시작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비롯되는 소득은 단축근로 보조금에 포함되어 상쇄되지만<sup>2)</sup>, 올해 12월 말까지는 이런 경우라도 단축근로 보조금이 온전히 보장되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축근로를 시작한 이후 근로자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고용주는 자신의 기업에 속한 직원이 단축근로 기간에 직업(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2023년 7월 말까지 해당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금을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sup>3)</sup>. 요구되는 전제조건에 맞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직업 교육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15~100%까지 교육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 관련자료

독일

<https://www.bmas.de/DE/Corona/erleichtertes-kurzarbeitergeld.html>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corona-virus-informationen-fuer-unternehmen-zum-kurzarbeitergeld>

1) 기업의 계약 체결량이 현격히 줄어들거나 일시적인 휴업 등으로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휴직이나 근로시간 감소 등을 겪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에 속하며 연방 고용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조금 지급기준을 근로시간 감소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기업직원 전체의 3분의 1에서 10%에 해당할 경우'로 완화시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복지이슈 투데이 85호 참고).

2) 단축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 근로를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상쇄되지 않는다.

3) 전제는 직원이 단축근로기간 중에 직업(재)교육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 교육 담당기관과 방법이 사회법 3권에 의거할 것. 교육이 120시간 이상이거나 진급교육지원법(Aufstiegfortbildungsförderungsgesetz)에 의거하여 시행될 것이다.

## 사회적 구조 전환을 통한 폭력 없는 스웨덴 구현



스웨덴에서는 지난 4월, 3주 동안 5명의 여성이 폭력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성평등 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인 재무부와 합동으로 스웨덴에서의 폭력 근절을 목표로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 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2016년부터 시행한 ‘폭력 근절을 위한 10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초 이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폭력 근절 방안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당면한 폭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폭력 범죄 양상이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성적 경향성을 보임에 따라,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가을학기부터 학교 교과과정의 하나인 성관계(Sex and Relationship) 과목에 최근 도입한 성적동의 법<sup>1)</sup>을 설명하는 등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비롯하여 스포츠 협회 등 사회교육기관에서도 반폭력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센터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가정 폭력 등으로 주거가 불안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쉼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셋째, 사회적 취약 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스웨덴 거주 여성 외국인은 파트너와 2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여성이 파트너의 폭력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민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도 거주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넷째, 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간, 젠더 관련 증오 범죄,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을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성매매의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성범죄자 전자태그 부착 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이것이 장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접근 금지 명령 요청을 신청함으로써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급증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 정도가 심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때 직접 가해자는 물론 디지털성범죄를 지시한 교사자(教唆者)까지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웨덴은 일상에서의 폭력과 사회적인 폭력 모두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에서부터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구조 전환을 통한 폭력 없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지금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관련자료

홍희정(2018). <https://www.kwdi.re.kr/research/tfrandView.do?idx=123089>

<https://www.thelocal.se/20210616/violence-against-women-a-look-at-the-swedish-governments-40-point-plan/>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6977771>

<https://www.thelocal.se/20210420/swedens-party-leaders-to-discuss-measures-against-male-violence-after-five-women-killed/>

1) 이 법은 상대의 확실한 동의 없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발효되었음(홍희정, 2018)



## 코로나19와 반려동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성찰



호주의 코로나19 '제로 케이스(zero case)' 전략은 사람 사이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수반한다. 특히 주정부들이 시행하는 락다운(Lockdown) 조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일부는 심리적 고독감,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특징으로 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뜻밖에도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팬데믹 퍼피 붐'(Pandemic puppy boom)이라 일컬어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급증은 현재 호주 사회에서 코로나19가 낳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물의약업계를 대변하는 Animal Medicines Australia (AMA)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는 인구수보다 많은 약 2900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길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의 61%가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미국(57%)이나 영국(40%)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가장 흔한 반려동물은 개나 강아지로 전국에 약 5백만 마리의 반려견이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다. 품종별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Labrador Retrievers), 보더 콜리(Border Collies), 프렌치 불독(French bulldogs) 및 저먼 셰퍼드(German Shepherds) 등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호주 가정의 27%가량이 고양이를 반려 동물로 키우고 있으며, 이밖에도 물고기, 새, 말, 토끼 등을 기르는 가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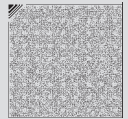
반려 동물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왔다. 예를 들면, 반려 동물과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애착감이나 동정심 등은 어린 아이 및 성장기 청소년이 성격 형성이나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치료나 개선에는 정서적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s)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는 이들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역 사회 내에서 같은 종의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의 상호 교류나 협력도 이웃 간

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터치(touch)를 통한 친밀감 형성이 심리적 안정을 키우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유기, 학대, 방임 또는 호딩(animal hoarding, 강박적 동물소유) 등과 같은 동물의 권리나 복지를 침해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단체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에 따르면, 매년 약 5만8000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징역형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 8월에는 한 유학생이 법적으로 금지된 강아지 꼬리 자르기(tail docking)를 몰래 시술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올해 6월 호주 최초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영구적인 동물소유금지(A lifetime ownership ban)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동물학대 예방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79)을 개정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주의 '반려동물법'(The Companion Animals Act 1988)에 따르면,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는 생후 12주까지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하고, 생후 6개월까지 법정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이 호주의 각 주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다양한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는 인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리는 경제적 또는 수의학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분야이다. 동물권의 존중은 사회복지가 목표로 하는 인권과 사회 정의의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들이 사회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학업과 돌봄 사이에서 고민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의 증가



일본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이다. 영 케어러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를 돌보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학업과 가족의 돌봄을 병행하는 영 케어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이슈가 된 배경은 재택케어의 보편화로 인한 가족 돌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택케어가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돌봄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도적 결함이나 돌봄 서비스의 공급부족 등 많은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나 가족 형태의 변화 또한 눈에 띈다. 특히 한 부모가정 등 돌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형태가 늘어나다보니 영 케어러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영 케어러의 증가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는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 케어러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보호자들도 가정 일 또는 가사 일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약 1만 300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sup>1)</sup>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5.7%, 고등학생의 4.1%가 영 케어러로 나타났다. 돌봄의 대상은 형제가 가장 많아서 중학생 61.8%, 고등학생 43.3%가 형제를 돌보고 있었다. 다음은 부모로, 중학생 27.7%와 고등학생 33.3%

가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에서는 형제의 경우 하루에 돌봄 시간이 3~7시간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돌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 케어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며, 현재 자신이 영 케어러인지 몰랐다는 응답도 약 20%로 나타나 잠재적인 영 케어러의 수도 적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고민은 적절한 상담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SOS를 보냈을 때 적절한 상담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케어매니저가 임시적인 상담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학업 고민과 돌봄 고민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영 케어러에 대한 또 다른 민간보고서<sup>2)</sup>에 따르면 실제로 영 케어러의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 케어러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권태감으로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학업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논리이다.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나 장애인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은 일반적인 가족구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많은 영 케어러들이 속해 있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전제로 하는 가족구성이나 세대들의 경제력이 현 실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먼저 당사자인 보호자와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며, 학교나 돌봄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 범위에서 학업지원, 진로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 厚生労働省(2021)「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young-carer-pt-02-shiryuu.html>)

2) 三菱UFJリサーチ(2021)「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報告書」([https://www.murc.jp/wp-content/uploads/2021/04/koukai\\_210412\\_7.pdf](https://www.murc.jp/wp-content/uploads/2021/04/koukai_210412_7.pdf))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대외홍보팀, 02-6353-0213, [today@welfare.seoul.kr](mailto:today@welfare.seoul.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이슈 Today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041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Tel. 02)6353-0213